

#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 사회주의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송정호(통일연구원)

## 1. 들어가며

2004년 들어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추측성 기사가 지면과 방송을 통해 난무하면서 관련 당사국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조차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 증대는 비단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지리적 거리’의 단축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급속한 진행과 포스트 모던의 가치 파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의 단축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흔히 북한의 변화를 예단하는 데 있어 과거나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수령’<sup>1)</sup>으로서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현상만큼 중요한 변인은 없다.

- 
- 1) 북한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수령’이라는 현상을 둘러싼 북한 체제의 성격 논쟁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 사』(서울: 한울, 1999) 참조. 그리고 수령 용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建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8) 2장 1절과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장 2절 참조. 또한 수령 호칭 사용의 빈도수 변화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김용현, “북한의 수령제 형성과 군사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60년대 북한 사회의 변화』(2004 한국정

이는 북한 연구 자체가 ‘김일성 연구’나 ‘김정일 연구’라는 것이 아니라,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만큼 북한 체제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현상도 드물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특정 현상을 잘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북한 변수에 관한 경험적 일반화를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문제에 대해 경험적 일반화를 모색할 정도로 과학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권력승계가 제도적 절차나 규칙에 의거한 것이 아닌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용이하지 않은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권력승계문제에 관한 몇몇의 접근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의 고찰을 분석해보면, 이미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권력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으로 크게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여러 징후들을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의미 있게 해석하고 김정일이 아들인 김정철이나 김정운을 후계자로 선정하여 실질적인 권력승계과정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한다.<sup>2)</sup> 제시하고 있는 징후들은 주로 고영희에 대한 이상화 작업, 장성택 등 권력엘리트의 변화, 이태올로기의 강조점 변화, 세대교체의 급진전 등이다. 이는 김정

---

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4. 3. 18) 참조.

- 2) 정성장은 ‘김정일 후계 문제’의 여러 가지 징후를 소개하면서 2004년 말 현재 후계 문제가 상당한 정도 진척된 것으로 판단한다.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 문제: 현황과 전망”, 『북한 사회의 입체적 이해와 북한연구』(북한연구학회 2004년도 연말학술회의 자료집, 2004. 11. 26), 159~160쪽. 또한 이기동은 2004년도 초반 시점에서 북한의 권력승계문제에 대해서 김정철로 후계자가 내정된 상태이며, 그 진척상황은 대략 1974년 2월 전원회의를 전후한 시점, 즉 비공식 후계지명의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본다. 이기동,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어디까지 왔나”, 『신동아』, 2004년 4월, <shindonga.donga.com>.

일의 자연적 수명에 대한 고려와 함께 선위(禪位) 방식의 권력승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은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사생적 경쟁으로 인한 승계위기 방지를 위해 전임통치자의 노선과 정책 유지라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수령론’에 이론적 기반을 둔 ‘혁명위업계승론’과 ‘후계자론’을 내세운다.<sup>3)</sup> 이는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놓은 논리로서 승계조건을 이루었던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을 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이는 승계의 초기조건으로서 소위 ‘당의 유일사상체제의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이 목적과 본질적 내용을 같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sup>4)</sup> 이러한 논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뿐만 아니라 사상이론의 대가로서 뛰어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 등을 후계자의 구비요건으로서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에 의한 선위 방식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반면 후자의 주장에는 김정일과 북한 최고지도부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는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인자인 후계자를 만들 여력이 없다거나,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승계과정을 고려하여 생존기간에는 권력을 내놓지 않을 생각에 후계자를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

---

3) 金裕民, 『後繼者論』(東京: 新文化社, 1986);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평양: 출판사불명, 1989) 참조.

4) 김정일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사업과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서로 뗄 수 없이 련결되고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전면적으로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 8. 2), 『김정일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14쪽.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설명과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권력변동의 징후에 대한 과잉해석을 통한 예단적인 분석을 차치하고라도 현재 북한이 처한 조건과 환경이 과연 과거와 같은 방식의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하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조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조차 많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고찰은 굳이 북한의 문헌이나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아니 많은 경우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북한의 주장에 의거해서는 돌발적인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없다. 오히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 등을 북한적 조건과 환경에 대비하여 권력승계의 이념형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과 예측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보다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북한의 권력승계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이 문제의 전개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사례를 김정일 권력승계 사례와 대비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사례에 대해서는 주로 러쉬(Myron Rush)의 고찰<sup>5)</sup>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권력승계의 계기, 권력승계과정과 권력구조의 변화, 권력승계의 결정요인, 권력승계의 위기에 대한 러쉬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김정일의 권력승계 사례와 현재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을 크게 과거와 같은 승계방식과 김정일의 급거 퇴임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권력승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정치적 리더십과 대내외적 환경과의 관계, 권력변동과 정책변화

---

5) Myron Rush,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4).

등의 관계 등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 1) 권력승계의 계기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이고 불규칙적이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최고지침인 당 강령이나 헌법에 최고지도자의 임기나 선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승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비자발적이고

<표 1>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최고통치자들의 퇴임 유형

유형	요인	사	례
자연적 승계	병사	Lenin(1924, 소련), Ho Chi Minh(1969, 베트남), Andropov(1984, 소련), Chernenko(1985, 소련), Le Duan(1986, 베트남)	
	돌연사	Stalin(1953, 소련), Gottwald(1953, 체코)	
	객사	Bierut(1956, 폴란드), Dimitrov(1949, 불가리아)	
	자연사	Gheorgh-Dej (1965, 루마니아), Brezhnev (1982, 소련), 毛澤東 (1976, 중국), Tito (1980, 유고), 김일성(1994, 북한)	
정치적 승계	반대파승모	Malenkov(1953), Khrushchyov(1964), 華國鋒(1978, 중국)	
	대중봉기	Rakosi(1956, 폴란드), Gero(1956, 헝가리), Ochab(1956, 폴란드), Novotny(1968, 체코), Gomulka(1970, 폴란드), Chervenkov(1954, 불가리아), Gierek(1980, 폴란드), Ceasescu(1989, 루마니아)	
	외세개입	Nagy(1956, 헝가리), Dubcek(1969, 체코), Kania(1981, 폴란드)	
	내외합작	Ulbricht(1971, 동독)	
	정책실패	Truong Chinh(1956, 베트남)	

\* Gottwald, Bierut, Dimitrov 등의 경우, 사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

\*\* Ulbricht의 경우, 당내 반대파와 민중봉기, 외세개입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 김일성의 경우는 심혈관질환 등에 의한 돌연사이나 나이 등을 감안, 자연사로 구분.

<출처>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pp. 335~336; 金德培, 『社會主義國家最高權力承繼事例研究』(서울: 國土統一院, 1986), 33~34쪽을 참조하여 재구성.

불규칙적인 승계계기의 발생은 후계자 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권력엘리트들의 성쇠와 쟁투 등 승계위기와 관련한 직접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승계의 계기는 ‘자연적’ 원인과 ‘정치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은 자발적 사임도 가능하였지만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자연적 승계는 정치적 대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나 신체적 무능력으로부터 유래되었다.<sup>6)</sup> 그리고 정치적 승계로서 실각은 반대파 음모, 대중봉기, 쿠데타, 외세개입 등과 그 복합형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

## 2)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변화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들은 당권은 물론 국가관리권까지 독점함으로써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sup>7)</sup> 특히 혁명과 건국을 주도하였던 최고지도자들은 자기의 투쟁경력을 ‘신화화’함으로써 카리스마적 지배를 굳히며 권력을 ‘인격화’하려고 하였다. 즉 일인지배체제가 정착되고 나면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 규칙<sup>8)</sup>이

---

6)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pp. 19~20.

7)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관료체제적 특성으로 인해 정치·경제·사회 부문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복수의 정치집단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치지도자가 권력을 획득·행사하고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민주적인 대의제 방식의 정치과정은 존재할 수 없었다. Leszek Nowak, *Power and Civil Society: Toward a Dynamic Theory of Real Socialism*(New York: Greenwood Pr., 1991); 박형중, 『북한의 정치와 권력: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서울: 백산자료원, 2002) 참조.

8)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제도적 규칙이나 원칙과 관행이 기능하였다. 첫째, 당대회와 같이 정치행위의 정당성을 마련해주기 위한 공식적 장치, 둘째, 개최되지 않아도 되는 정치국과 같이 규범적 권위가 확실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의 권위가 정상적인 제도적 절차에 따른 권력승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이양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나 유고가 곧바로 권력승계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권력의 분산을 수반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고지도자의 사망이나 유고로 인한 권력의 공백이나 승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체로 과도기적인 ‘과두제적’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해 왔다. 사전에 전임통치자의 지명에 의해 후계자가 선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계자 스스로가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일인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과두제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과두집정자들(oligarchs) 중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정책의 채택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 있었다. 과두집정자들 대부분이 전임 일인지배자의 후원하에 최상층 권력기구에 들어간 사람들로서 승계경쟁을 벌였기 때문이었다. 최고지도부 내 경쟁이 당 중앙위원회로 확장되면 이들은 군부, 정치보위부, 문화·과학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당기구, 경제관료집단들의 지지 획득을 위해 노력하였다.<sup>9)</sup>

승계경쟁은 후계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후보자들 각자는 경쟁에 공헌할 수 있는 일정세력을 대표하였다. 승계경쟁은 그 강도와 결과에 따라 비교적 질서 있게 권력이 이양되는 제한 경쟁(a limited contest), 사회적 무질서의 극복 혹은 강력한 도전자에 대한 승리 이후 지배적 지도자가 최종적으로 안정된 개인

---

하지 않은 규칙, 셋째, 간부의 임면권을 가지는 당 중앙위원회와 같이 규범적 권위가 확고한 규칙, 넷째, 공식 입후보자에 대한 찬성과 같이 구속력을 가지는 비공식적인 관행들. Game Gill, “Institutionalism and Revolution: Rules an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Soviet Studies*, Vol. XXXII, No. 2 (April 1985), pp. 213~215.

9)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p. 17.

지배를 수립하는 확대 경쟁(an extended contest), 실질적인 권력을 획득한 지배적 지도자가 새로운 위기를 유발하거나 위기를 지속시킴으로써 그의 지위를 강화하는 데 실패하는 불확정 경쟁(an indecisive contest)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승계경쟁하에서 과두집정자들은 당과 국가의 정책결정과 당·정 관료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자파의 세력 강화와 다른 파벌의 부상 견제, 자파 내에서 자신의 입지 강화와 경쟁자에 대한 견제 등을 목표로 활동하였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과두제는 대체로 수년 동안만 지속되는 단기간적인 것이었다. 과두제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적 일인지배(limited personal rule)’로 이행하고, 이는 승계위기를 극복하여 새로운 일인지배체제로 전환되었다.

제한적 일인지배 단계에서 나타난 특징은 주요한 정책이 지배자의 의지에 의해 채택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일인지배자는 주요 정책을 혁신할 경우에는 당 정치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정치투쟁과정에서 ‘지배적’이기는 하였지만 ‘절대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인지배자는 당 정치국의 성원들을 임명·제거함으로써 권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테러를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빈번하게 2선 지도자들의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그에 대한 의존적 측면을 확대시키고 저항의 구심점이 되는 ‘사적 조직’의 형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sup>11)</sup>

일인지배자의 당 정치국에 대한 통제는 전체 국가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통제권과 ‘효과적인’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 정치국의 성원들은 다른 반대자들과 함께 선별적 이슈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으나, 일인지배자의 추방을 목표로 한 저항운동은 실패할 경우에 참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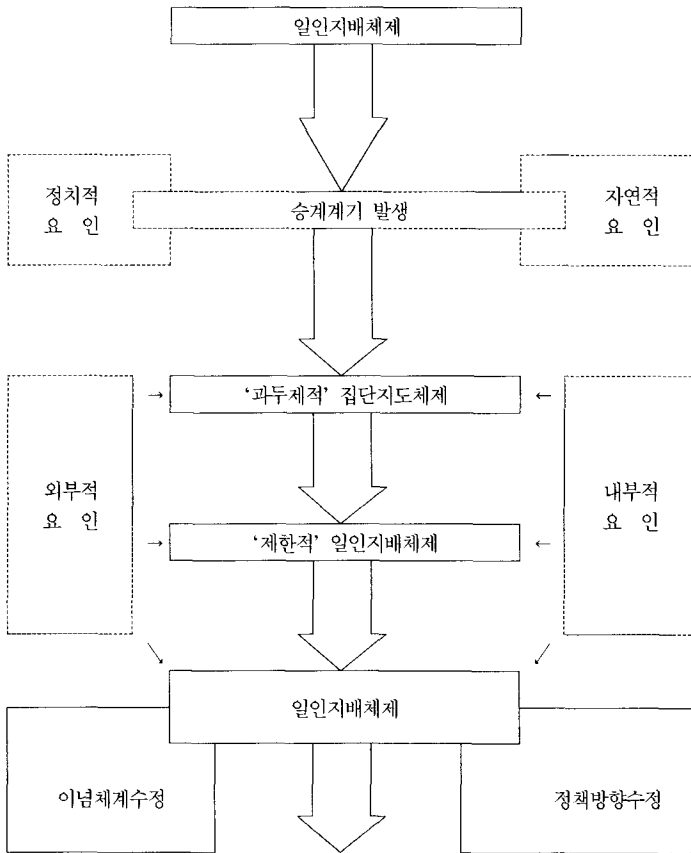
---

10) *Ibid.*, pp. 17~21.

11) *Ibid.*, pp. 14~15.



<그림 1> 후계체제 미구축시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출처> 金德培, 『社會主義國家最高權力承繼事例研究』, 11쪽 참조

결과를 초래하였다. 2선의 지도자들은 주로 정책과 인사의 핵심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위상을 보강하려 하고, 일인지배자의 권력이 더 이상 증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하였다. 2인자 그룹들은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자문 형식의 개입을 확실히 하려 하였고,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비정치적인 구속(정치보위기구의 확대, 구

속 투옥의 위협 등)의 남용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sup>12)</sup>

### 3) 권력승계 결정주체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승계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국가마다 조건과 상황이 달랐지만 통상 소비에트 리더십, 국가적 리더십(보다 자세히 당 정치국), 하위엘리트, 국민 등 크게 네 가지 주요한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었다.<sup>13)</sup>

이러한 요인 중 가장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우선 구소련의 지도자들이었다. 스탈린시대에 소련은 동유럽 국가의 모든 최고지도자들을 지명하였다. 일시적으로, 특히 1956년과 1968년에 결정권을 상실한 듯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소련은 대개 직접적인 개입 없이 권력승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둘째, 몇몇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 정치국이 때때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1956년 폴란드 공산당 정치국은 모스크바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몰카(W. Gomulka)를 새로운 권력승계자로 선택하였고, 1965년 루마니아 공산당 정치국은 선임자 데지(Gheorgiu-Dej)가 선택한 차우세스쿠(N. Ceasescu)를 소련의 간섭 없이 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승인하였다. 1968년 체코 공산당 정치국은 노보트니(A. Novotny)의 후계자로 두브체크(A. Dubcek)를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소련측의 결정권을 무시해버렸다.

셋째, 하위엘리트(sub-elite) 집단도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승계 경쟁의 결과 가운데 하나는 중앙으로의 권력집중이 분산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력이 축소된다는 점이었다. 권력승계를 위

---

12) *Ibid.*, pp. 16~17.

13) *Ibid.*, pp. 22~23.

한 후보자들이 지지를 획득하고자 특별제도(예를 들어 당·정·군)나 가능 집단과 접촉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협상능력도 증대하게 되었다. 이들은 중앙에 대항하여 자율성을 더 높일 수 있었고, 최고지도자의 생각이나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과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부 관료, 군 장성, 지방 지도자 등과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제도(조직)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권력승계과정에서 증가하였다. 나아가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들(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에서는 경제관료와 문필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괄목할 만하게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동구에서는 승계기간 동안 반소감정을 유도하는 매우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가 승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국민(the nation) 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여론과 민족감정은 권력승계의 몇몇 사례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56년 10월 헝가리의 게로(E. Gero)의 실각과 나지(I. Nagy)의 승계, 1956년 폴란드의 비에루트(B. Bierut) 사후 오참(E. Ochab)의 실각과 고몰카의 승계, 1968년 1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노보트니 실각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지도부 내의 중요한 변화를 유발하고 권력승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사회적 계층으로서 청년, 노동자, 지식인, 농민들이 있었다.

#### 4) 권력승계 위기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흔히 이데올로기 투쟁을 불러일으켰다. 레닌(V. Lenin)의 사후 트로츠키(L. Trotskii)의 ‘영구혁명론’과 스탈린(J. Stalin)의 ‘일국사회주의론’의 대립이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그 후에도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군림하려던 일인지배자들이 자기 나름의 현실적 입장을 강조하여

이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재해석이라고 내세웠던 사례들이 있었다.<sup>14)</sup>

정책 쟁점들과 관련한 핵심문제 취급은 후계자의 전임통치자에 대한 태도 여부에 달려 있었다. 대부분 후계자들은 전임 통치자들을 비판하여 그의 위신을 줄이고 파괴함으로써 광범위한 정책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과거 정책실패의 속죄양으로 희생시킬 수 있었다.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있었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격하가 전임통치자 비판의 전형이었다. 스탈린 격하 운동은 소련 내의 정치변동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블록의 모든 국가들의 기존 질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전임 통치자 격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승계과정에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추세가 되었다. 전임 통치자 중에서 후계자들로부터 비판을 면한 사례는 레닌, 불가리아의 디미트로프(Dimitrov), 호치민(胡志明), 김일성뿐이었다.

스탈린 사후에는 권력승계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정통성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갔다. 물론 차원 높은 정책 문제는 이데올로기와 전혀 무관할 수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쟁점은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거론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승계과정에서 논쟁이 되었던 정책 쟁점은 특정조직이나 기능집단들의 자율성 문제를 포함한 자유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당 기구의 역할과 중앙 통제와 지방 자율성의 균형 문제, 소비재·군비·투자 간의 자원배분 등의 경제정책 문제, 폭력이나 소련의 간섭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에 대한 대중의 승인 및 지지 확보 문제, 전임통치자에 의한 정치적 희생자의 복권 문제 등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였다.<sup>15)</sup>

---

14)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서울: 한길사, 1982), 319쪽.

15) Myron Rush,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p. 25.

권력승계에 수반되는 혼란은 해당 국가의 전반적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고 지도부 내부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지도부 내부의 파벌 투쟁은 1956년부터 1962년 사이의 불가리아의 경우처럼 광범위한 관료조직의 재편성을 초래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1953년 체코슬로바키아나 1956년 10월 헝가리에서와 같은 극심한 혼란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권력승계가 큰 어려움 없이 완료될 수도 있었지만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시도가 심각한 혼란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1956년과 1970년 폴란드에서 지도부의 교체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사회주의 체제가 승계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정책의 점진적 변화’와 ‘인사의 점진적 교체’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이 보장되어야 하였다. 승계위기는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측정될 수 있었다. 이 요인에 따라 승계에 수반되는 혼란의 범위와 승계 이후 정치발전의 전도가 가변적이었다. 후계자가 급속하게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우월성은 다른 경쟁후보자들의 주된 공격대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 지도자는 주요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경쟁 후보자들의 지위를 축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적어도 일인지배체제의 확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행기구인 당 비서국에 대한 완벽한 통치권을 확보하는 한편, 당 중앙위원회의 주요 기관에 측근 인사를 충원시키면서 잠재적인 반대세력들이 조직화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였다.<sup>16)</sup>

이상과 같이 한 지도자가 승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일인지배체제의 성립 후 그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나 쿠데타 등에 대처하여 자기 체제의 안전을 확보해 갈 수 있는 힘은 별개였다. 스탈린의 견해에

16) *Ibid.*, pp. 26~28.

따르면 일인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패배한 정적들이나 잠재적인 반대파들을 무력화시키거나 탄압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물론 보다 선진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기안정적 과두제 (self-stabilizing oligarchy)’의 강력한 요소들이 제도화를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진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더 큰 승계위기를 경험하였고, 일부 국가에서는 승계과정에서는 테러가 수반되었다. 권력승계가 정치적 요인보다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경우(1965년 루마니아), 소련이 승계 문제를 통제할 수 있었을 경우(1971년 동독), 강력한 대안적 후보자가 없었을 경우(1970년 폴란드), 외부적 압력요인이 상호경쟁을 제한하도록 지도자들을 속박하는 경우(1969년 베트남)에 잔혹성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sup>17)</sup>

### 3. 김정일의 권력승계

#### 1) 권력승계의 계기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과정은 상당기간 비밀에 붙여진 채 진행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부분 중 하나는 김일성이 권력승계 방법으로 아들인 김정일로의 선위 방식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시기와 후계자 수업의 차원을 넘어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권력승계의 구체적인 계기를 밝히는 작업으로서 김정일에서 다음 세대로의 권력승계문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

17) *Ibid.*, pp. 26~29.

주지하다시피 김정일은 1973년 8월에 열린 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자리에 오른 이후, 1974년 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후계체제를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정치위원에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 선정되었다.<sup>18)</sup> 이때부터 김정일은 당, 군대, 국가기관, 대남 및 대외사업 순서로 공식적인 지도체제를 마련해나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뒤에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sup>19)</sup>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일성이 권력승계를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그 이전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일반적으로 1971년 6월 24일 개최된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있었던 김일성의 연설이 최초의 언급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혁명을 계속하여야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우리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sup>20)</sup>다고 역설하였다. 이 연설 후 당 조직과 사로청 조직들은 후계문제를 혁명의 전도와 운명을 결정할 사활적 문제라고 선전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김일성이 권력승계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시점은 훨씬 오래 전부터였던 것으로 추론된다. 김일성은 1956년 호루시초프

18) 일부 연구는 김정일을 ‘혁명의 계승자’로 하는 결정서가 채택된 것은 이보다 1년 뒤인 1975년 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0차 전원회의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역시 ‘신경완’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金光庸, “北韓 ‘首領制’ 정치체제의 構造와 特性에 관한 연구”(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105쪽;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金正日』(서울: 中央日報社, 1994), 96쪽.

19)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돌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를(1986. 5. 31),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00~101쪽.

20) 김일성,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한 연설(1971. 6. 24),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204쪽.

의 스탈린 비판과 ‘8월종파사건’이 있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소련·동구를 방문하여 전입자 비판과 정책 변화를 목도하였고, 이러한 배경하에 진행된 중소분쟁을 지켜보면서 권력승계문제의 심각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우리는 자기 세대에 혁명위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의 대에 가서라도 완성하도록 해야”<sup>21)</sup>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이후 수정주의 대두에 대한 경계 속에서 ‘수령론’에 기초한 ‘혁명위업계승론’으로 정리되어 나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시 김일성의 고민이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김일성이 아들인 김정일을 대안으로 권력승계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한 계기는 1967년에 벌어진 소위 ‘갑산파사건’과 1969년 1월에 숙청된 ‘김창봉·허봉학사건’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이 두 사건은 김일성의 2인자 자리를 둘러싼 다툼, 즉 승계경쟁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었다. 전자는 제2차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정치위원회 후보위원에까지 오른 김영주에게 권력이 집중되어가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자 한 박금철·이효순 등을 숙청하기 위한 사건이었고, 후자 또한 김영주로의 권력 집중 현상에 반기를 들고 독자적인 대남사업을 펼쳐 후계구도를 변경시켜 보려던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21) 김일성,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 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 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3. 2. 8), 『김일성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75쪽. 또한 김정일은 당무를 시작한 직후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으며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하여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발언하였다. 김정일, “혁명적인 문학예술 작품 창작에 모든힘을 집중하자”,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4. 12. 10),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48쪽.



물론 이 사건들이 승계경쟁의 성격을 띠었다고는 하나 일차적인 배경에는 당시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대내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는 가운데 당대표자회의 경제·국방 병진 노선과 중공업 우선정책 지속 결정,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 등 경제관리방식과 당 기구의 역할 축소, 사회주의 발전 노선과 인텔리의 역할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중·소분쟁의 발생과 사회주의권 분열, 중국 문화대혁명 발생과 북·중관계의 악화, 소련·동구의 경제개혁과 ‘수정주의적 요소’의 도입 시도,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5·16 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 성립, 한일협정 체결 및 베트남전 파병 등이 ‘혁명적 대사변’<sup>23)</sup>의 도래에 대한 주관적 열망을 부풀리고 있었다.

김일성은 이러한 대내외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위기로 보고 권력집중을 가속해가는 방식으로 대처하고자 하였고, 이는 권력승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실현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신화 창출을 토대로 신격화된 김일성의 권위가 수령제 확립뿐만 아니라 후계체제 성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으로의 권력집중 강화는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특히 7개년계획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국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sup>24)</sup> 이러

22) 정창현, 『겉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114~117쪽.

23) 혁명적 대사변이란 “남조선혁명을 완수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결정적 계기를 의미”한다.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하여”, 도, 시, 군 및 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67, 3. 17~24),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37쪽.

24) 북한은 계획 차질로 인하여 7개년계획의 하반기 목표달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새로운 계획화 방법론 도입, 지방당 기구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관료들은 ‘수정주의적 요소’ 도입 등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3차 전원회의(1966. 3. 28~4. 4)에서 김광협은 2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것을 발표하였

한 상황 속에서 북한 사회는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급속히 군사화·동원화되어 갔으며, 사회적 긴장성의 증대는 일인 정점의 권력 집중 강화를 용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 회의에서 김정일이 이후 당 조직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후계체제를 용이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sup>25)</sup> 2차 당대표자회에서 권력집중 강화와 당 사업의 일상성 통제를 위해 각각 도입된 총비서제와 비서국 제도는 그 권한이나 기능, 이후 김정일의 당 활동의 궤적이나 김정일·김일성 간의 당·정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한다면, 김정일 후계체제 형성과 상당한 관련을 갖는다.

당대표자회 이후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고조되었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전면적으로 확장된 것은 1967년 5·1절 기념행사에서였다. 북한이 이 행사에 참여한 외국 대표단의 말을 인용하여 쏟아낸 김일성에 대한 칭송은 이전의 북한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개인숭배 지향의 언설들이었다. 당 지도부는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 극단적인 개인숭배 담화를 유포시켜서 개인숭

---

다. 당대표자회 개최를 발표한 이후 중국에서는 1966년 5월 25일 네위안쯔(聶元梓) 등이 베이징대학에 붙인 대자보를 계기로 문화혁명이 ‘성화원(星火燎原)’처럼 번져가게 되었고 1964년 말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북·중관계는 홍위병들의 김일성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방으로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홍위병들이 비난한 내용에 대해서는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上卷(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306쪽 참조). 또한 홍위병들의 혁명 원로들에 대한 핍박은 북한 최고지도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북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1), 245~249쪽 참조.

- 25) 스즈키 마사유키는 위원장·부위원장 직제 폐지와 상무위원회 설치가 각각 위원장 외 부위원장 권위의 용인 과 정치위원 담당 전문부서의 독립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中央日報社, 1994), 84쪽.

배를 자연스러운 사회적 정서로 만들어 나가려고 시도하였다. 이후 개인승배 현상들이 이전과 비교하여 전면적이고 공개적이며 통제가 불가능한 자가동력을 가진 사회적 조건 그 자체가 되어갔다.<sup>26)</sup>

이 같은 개인승배의 급격한 흐름과 맞물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1967. 5. 4~8)에서 ‘갑산파’들이 숙청되었다. 갑산파에게 붙여진 최대의 죄목은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대한 반대였다.<sup>27)</sup> 이 회의 직후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의 작업은 ‘5·25 교시’(1967. 5. 25)를 통해 사회 일반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 교육이 당사상교육에서 가장 우선되었고, 이를 위한 학습체계가 신속히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김일성 권위의 신격화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절대적인 권위 창출을 통해 자신의 후계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하여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린바오(林彪)가 행하던 방식이었다.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인지배자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었다.<sup>28)</sup>

---

26)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301쪽.

27) 갑산파의 죄목에 대해서는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뽑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7. 6. 15),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32~236쪽;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스>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1982. 10. 17),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63~264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 력력』(평양: 평양출판사, 1996), 42~44쪽 참조.

28) 린바오(林彪)는 1959년 7월, 팽덕회 해임 이후 국방부장이 되면서 마오쩌둥(毛澤東)의 후계를 노릴 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대가는 가장 적고, 수확은 가장 많고, 시간은 가장 빠르게”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오쩌둥의 신격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군대 내에서 사호련(四好連, 네 가지 면에서 뛰어난 중대) 운동(1960. 1), 사개제일(四個第一) 제창(1960. 10), 모주석어록(毛主席語錄) 학습(1961. 4) 등을 지시하였고, 나아가서는 ‘네 가지

요컨대 김일성은 1960년대 중반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권위의 신격화와 권력의 절대화라는 권력집중의 강화를 통해 극복하려 하였고, 이러한 의도는 모든 부문의 권력이 상층으로 집중되는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으며, 이 와중에서 갑산과 사건과 김창봉·허봉학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혈연관계에 의거한 선위 방식의 권력승계 계기가 앞당겨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2) 김정일의 권력승계 과정

김정일이 최고통치자의 지위에 오르기 이미 오래 전부터 권력승계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정일은 대학에 진학하면 서부터 후계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연마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업을 받았다. 김정일은 1960년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소위 ‘제왕학’에 비견되는 후계자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였다.<sup>29)</sup> 김정일은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따라 정책집행 현장을 참관하였으며, 고학년 때부터는 당·정·군 주요 회의 등 정치현장을 수없이 견학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수학과정에서 후계체제에 필요한 자신의 인적 기반을 형성할 수 있었다. 김정일과 어린 시절을 같이한 만경대혁명학원 출신들, 김일성대학 동창생들, 1960년대에 조직지도부를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에 들어온 인물들이 김정일시대를 이끄는 권력엘리트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sup>30)</sup>

---

위대함(위대한 스승,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통솔자, 위대한 길잡이)을 내세웠다.

29) 당시 각 분야의 최고 실력자들로 구성된 지도교수 그룹으로부터 과외수업을 받았다. 특별 지도교수 구성이 당정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신평길, “金正日체제의 출범과 그 통치체제의 확립(II)”, 『北韓』(1995. 2), 138쪽.

30) 박형중·이교덕·정창현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김정일은 1964년 대학졸업 후 당 중앙위원회 비서처에 배속되어 6월 19일부터 공식적인 당 사업을 시작하였다.<sup>31)</sup> 비서처는 당 사업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후 1965년 5월부터는 당시 내각 제1부수상이었던 김일의 참사실로 옮겨 행정 전반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그는 이 당시부터 이미 김일성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32)</sup> 1966년 초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중앙기관지도과 책임지도원을 맡았고, 1966년 2월부터는 인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하는 데 이바지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이 되어 영화부문의 사업을 시작하였다.<sup>33)</sup> 그리고 1966년 5월부터 1969년 7월까지 본격적인 사상학습을 전개하였다.<sup>34)</sup>

김정일의 위상은 1967년 5월에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갑산파’와 당 선전·문화 담당 간부들에 대한 숙청을 주도하면서 급격히 상승하였다. 김정일은 문건작성을 비롯한 회의 준비부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준비를 하였고,<sup>35)</sup> 비판대상자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97쪽.

- 31) 김정일의 최초 보직을 김일성 경호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497쪽;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정치사』(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172쪽. 신경완은 1960년대 중반 당시 김정일이 호위국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申敬完, “겉에서 본 金正日(上)”, 『月刊中央』(1991. 6), 359쪽. 1965년 4월 10~20일 김일성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김정일이 경호 책임자로서 동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조선신보』, 1983년 1월 21일; 朴奎植, 『김정일평전』(서울: 陽文閣, 1992), 102쪽에서 재인용.
- 32) 황장엽은 1964년 4월 당시, 김정일의 추천으로 김일성종합대 총장이 되었다고 증언한다.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141쪽.
- 33) 朴奎植, 『김정일평전』, 104쪽;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정치사』, 172쪽.
- 34) “영원히 주체혁명의 강령따라”, 『로동신문』, 2004년 2월 21일. 이는 1960년대 초중반 누가 더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가에 대한 선명성 경쟁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서 개인숭배 문제의 초점인 복수의 ‘수령’ 문제 해결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 35) 당력사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 력력』, 42쪽.

인 박금철·이효순 등에 대해서 직접 질책을 가하기도 하였다.<sup>36)</sup> 김정일은 이 회의를 통해 노동당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부각시키게 되었다. 김정일은 이 사건으로 인해 김영주의 측근이었던 선전비서 김도만과 국제비서 박용국이 제거됨으로써 후계체제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sup>37)</sup>

김정일은 이 전원회의 이후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당내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김일성 신격화를 주도하였다. 특히 김정일은 1967년 9월에 개최된 당 정치위원회를 계기로 영화가 대중의 인기를 독점하던 시절에 선전선동부 문화예술지도과장이 되어 1970년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으로 승진<sup>38)</sup>할 때까지 적지 않은 일을 해내면서 당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사상 부문의 전반을 관장하는 실권자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 11월에 열린 5차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5차 당대회에서는 비서국으로 하여금 “간부 문제, 대내 문제 및 그밖의 당면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정일이 이후 당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 후계자의 비서국을 통한 당 정치국 장악은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이즈음 노동당은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에 대비하여 당증교환사업을

---

36) 김진계·김응교, 『어느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하)』(서울: 현장문학사, 1990), 79~85쪽 참조.

37)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173쪽;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499쪽.

38) 많은 국내 출판물들은 1969년 9월에 김정일이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전기는 1970년 9월로 밝히고 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 것은 1972년 10월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력전(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145쪽.

1972년 말부터 전개하였다. 1956~1957년 이래 처음 실시된 이 사업은 사실상 1967~1970년의 당 간부들에 대한 대량숙청을 기층 당조직으로 연장시키는 작업이었다. 상당수의 당원이 유일사상체계 위반 등을 이유로 당에서 축출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 형성을 위한 당내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sup>39)</sup>

이후 1973년 7월에는 당 중앙위원회 부장,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비서가 됨으로써 사실상 후계체제의 토대 마련을 완료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빨치산 1세대들은 제5차 당대회 전후부터 김정일로의 후계자 결정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력승계 문제가 김영주의 건강 등을 이유<sup>40)</sup>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계속 거론되었으나, 당면한 정치일정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등에 밀려 논의의 이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후계자를 공식 지명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명 시기를 조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3년에 이르러서야 우선 당의 조직·선전 부문을 김정일에게 맡기자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제5기 7차 전원회의(9. 4~17)에서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겸 선전비서의 자리를 맡기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후계문제를 매듭지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1)</sup>

39)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500~501쪽.

40)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서둘러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김영주의 건강문제가 있었다. 1972년 남북고위급회담의 남측 실무책임자였던 정홍진은 김영주가 건강하였더라면 김일성이 김정일의 후계를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좀더 여유를 두고 진행시켰을 것이라고 증언한다(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金正日』(서울: 천지미디어, 1997), 101~102쪽). 그러나 황장엽은 후계를 둘러싸고 김정일과 김영주의 권력투쟁이 심각하게 전개되었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선택한 듯한 인상을 주자 김영주는 ‘식물성 신경 부조화증’이라는 병을 얻었다고 말한다(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168쪽). 이에 대해 신경완은 김영주가 김정일의 가장 든든한 후견자였고, 대학 재학시와 노동당 조직지도부 재직시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고 증언한다(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 107쪽).

그러나 최고지도부 내에서는 후계문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졌던 시점은 김일성 환갑을 전후한 시기로 추론된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김일성의 환갑이 지난 얼마 후 빨치산 1세대들이 거의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최종 낙점된 것으로 나타난다.<sup>42)</sup>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출판물들은 1972년 4월 15일이 지난 어느 날 “혁명의 대가 바뀌어 지는 력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김정일의 제의로 김일성이 빨치산 1세대들과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들인 “새로 자라난 군중, 병중 사령관들”과 만경대에서 하루를 보냈다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있다.<sup>43)</sup>

### 3) 권력승계 결정주체

중국과 북한에서는 동구의 경험과는 달리 최고통치자가 가장 결정적인 후계자의 결정주체로서 역할을 하였다. 스탈린 사후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위기와 ‘수정주의’의 대두에 놀란 마오쩌둥(毛澤東)과 김일성은 후계자를 사전에 지명하거나 유촉(遺囑)<sup>44)</sup>하는 통치권의 선위를 권력승계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혈연관계에 의한 선위

41) 金光庸, “北韓 ‘首領制’ 정치체제의 構造와 特性에 관한 연구”, 103~104쪽.

42)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서울: 바다출판사, 2003), 82~83쪽.

43) 당력사연구소, 『김정일동지략전(1)』, 131~132쪽;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157쪽.

44) 흔히 전임통치자에 의한 유지는 후계자에게 정통성의 큰 근거가 되지만, 화귀평(華國鋒)과 말렌코프(Georgii M. Malenkov)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정통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전임자에 대한 숭배의식이 식어감에 따라 후계자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생겼다. 小倉和夫, 『權力の繼承』(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5), 167~168쪽. 유언과 유지의 존재 유무와 병행하여 권력승계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유언 공표 시기와 유언 해석권 장악 문제이다. 이에 대한 모택동 사후 사례는 산케이신문 특별취재반, 임홍빈 옮김, 『모택동비록(上)』(서울: 문학사상사, 2001) 제1부 참조.



방식을 성공시킴으로써 일인지배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일인지배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권력승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견 역할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후견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물론 후계자가 일인지배자의 후견 아래 별 어려움 없이 후계 지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한 가운데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형성해 나가지 못한다면 승계 완료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고통치자는 성공적인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수령제’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의 성립은 목적과 본질적 내용을 같이하였다.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 김일성의 ‘제한적’ 일인지배체제로부터 수령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1961년 4차 당대회 이후 대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안정을 보이던 제한적 일인지배체제는 1960년 중후반 북한 체제의 위기를 계기로 권력을 더욱 ‘수령’이라는 정점으로 응집해 나갔다. 이러한 권력집중이 승계에 대한 배타적인 결정주체로서 수령의 위상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김정일로의 승계는 ‘지명’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김정일은 1967년 갑산과 숙청을 주도한 이후 수령제 확립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급속히 부상할 수 있었다. 김정일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음으로써 후계자 선정을 앞당길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이 단지 김일성의 후광이나 빨치산 1세대들의 지지만으로 권력승계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다. 유력한 후보자로 부각될수록 견제하고 낙마시키려는 경쟁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재적인 도전자를 견제·제거하고 최고통치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승계의 결정요인을 검토하는 데 있어 김일성의 의지와 후견보다 김정일의 능력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분석에는 문제가 있다.<sup>45)</sup> ‘인치적’ 특징을 갖는 정치권력구조에서는 ‘자리’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원만한 권력승계를 위해서는 후계자의 능력 구비와 더불어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세력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중국의 린바오와 화귀핑(華國鋒)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인지배자의 지명이나 유족이 성공적인 승계 완료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다. 권력승계 과정이 제도화하지 않은 국가에서 보다 결정적인 변수는 일인지배자의 의지와 후견 역할이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던 것은 ‘유교적인 윤리관’<sup>46)</sup>에 따라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김일성의 의지와 후견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견 아래 다른 어떠한 잠재적 후보자보다 월등한 지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경쟁의 출발점이 달랐다고 보아야 한다. 그는 ‘제왕학’에 비견될 정도의 후계자 수업을 받아왔고, 당무에 참여해서는 나이나 능력보다 월등한 직책과 권한을 부여받아 ‘선발주자’로서 후계체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일성의 의지와 후견이 가장 중요하였다는 것을 아무리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45) 이와 관련한 논쟁 정리는 이수석, “김정일연구 쟁점과 과제”, 『현대 북한 연구와 남북관계』(북한연구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2004. 9. 17), 86~88쪽 참조.

46) 성혜랑은 이에 대해 “북의 사회는 사회주의 사상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농도가 짙은 ‘공산국가’라 하였지만 전통적인 유교문화권에 속한 윤리관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은 수령님 자신이 유교 교육을 받았으며, 그의 지식의 기본은 ‘공자의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한다. 성혜랑,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368쪽

#### 4) 권력승계 위기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의 승계과정에서 커다란 승계위기가 있었다는 증거나 주장은 없다. 다만 후계자의 지위를 노린 ‘제한 경쟁’이나 권력승계의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1967년 갑산파와 1969년 빨치산 군부와 숙청 사건은 김일성의 후계자 지위를 노린 2인자 경쟁의 성격을 내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 권력을 가진 김일성에 의해 쉽게 극복될 수 있었다.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게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김일성 권위의 신격화와 권력의 절대화가 김정일의 후계체제, 소위 ‘유일적 지도체제’ 구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초반 ‘김성애 사건’과 같은 혼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승계 위기를 겪지 않았다.

‘김성애 사건’은 1969년 군부와 숙청을 계기로 조선민주여성동맹을 장악한 김성애가 김영주의 외병으로 생긴 후계문제의 혼선 속에서 ‘김평일’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도모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할 1970년 전후 시점에, 김성애는 2인자처럼 행사하면서 김정일을 호통치고 있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sup>47)</sup> 당시 북한 언론들이 김일성 ‘교시’와 김성애 ‘말씀’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sup>48)</sup> 또한 김성애는 김정숙의 우상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빨치산 1세대들에게 ‘도전’하여 특권 제거도 시도하였다. 김정일은 김성애와 그의 측근들의 월권행위와 비리를 조사, 1974년 2월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되자마자 평양시당과 중

47) 위의 책, 368쪽.

48) 김성애의 위상 변화에 대한 문헌 분석은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55쪽 참조.

양여맹에 검열단을 파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시당 전원회의와 여맹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처벌하였다.<sup>49)</sup>

이에 반해 ‘김동규 사건’은 후계체제 확립 과정의 속도와 방법을 놓고 벌어졌던 사건으로 알려진다.<sup>50)</sup> 이 사건은 당시 당비서이자 국가부주석으로서 김정일 후계자 추대에 가장 앞장섰던 김동규가 1976년 6월 초 열린 정치위원회에서 김정일의 간부인사와 계급정책, 후계체제 확립 과정 등을 집중 비판하여 당 최고지도부 내의 의견이 갈리면서 발생한 혼란이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후계체제 구축의 속도문제였다. 이는 사실상 김정일의 정치활동에 대한 반대의 표시였기 때문에 김동규가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일성은 그를 숙청하였다.<sup>51)</sup> 그 결과 김동규와 유장식<sup>52)</sup>은 ‘당의 유일사상체제 10대 원칙’에 해독을 끼쳤다는 죄목으로 정치범수용소로 들어갔고, 기타 이들의 추종자들도 농장과 광산으로 축출되었다. 이 사건의 파동으로 급부상하던 김정일도 이 무렵 근신하게 되었다. 김동규 등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된 불과 몇 년 사이에 급속하게 측근들을 배치하여 나가는 상황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

49) 申敬完, “결에서 본 金正日(上)”, 368~369쪽.

50) 그러나 황장엽은 ‘김동규사건’이 김정일 문제와 무관하다고 증언한다.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507쪽.

51) 이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金正日』, 112~120쪽 참조.

52) 유장식은 1975년 5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대남사업부서에 대한 지도검열사업 후 근로단체담당 비서로 올라섰던 인물이다. 황일호, “金正日 등장과 對南工作의 방향전환”, 『月刊中央』(1994년 2월), 580~581쪽. 1994년도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보고서는 유장식이 송호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 4. 북한 권력승계문제의 쟁점과 전망

### 1) 권력승계의 계기

현재 북한에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과 비슷한 경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몇 가지 징후들을 해석하여 권력승계과정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의 승계 경험이나 논리, 김정일의 ‘자연적 수명’을 고려한다면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권력승계 실패 경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다음세대로의 권력승계 역시 ‘최고지도부의 안전보장’과 ‘사생적 승계경쟁 방지’를 위해서는 ‘전임 통치자의 노선 및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 차단’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내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례의 방식이 설명과 예측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징후들이 승계 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일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현재 북한이 처한 조건이나 환경이 과거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권력과 경제권력의 분리, 초보적인 사적(경제적) 자율성의 증대와 국가와 사회 관계의 변화 등의 불가역적인 흐름은 권력집중을 통한 후계체제 확립이라는 과거 방식의 재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권력 각 영역, 특히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의 분권적 경향의 증대는 김정일 정권의 지속, 당의 우월적 지위 유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방식의 방법과 논리의 현실적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전제로 후계체제의 수립 및 정통성 확보, 김정일과 후계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 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는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한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징후들에 대한 해석을 더욱 정교화하여야 한다. 즉 승계과정의 이미 시작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여러 징후들에 대해 과잉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조건과 환경 속에서 후계자가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권과 후계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다음 세대로의 권력승계가 다른 방식에 의거하거나 혹은 후계체제의 미구축 전에 승계 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사례가 역사적 조건과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다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 절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정일의 퇴임 형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승계 계기만을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일인지배자의 퇴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사망의 유형으로 병사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투병기간이 길수록 권력승계 문제를 정리하는 데 유리하다.<sup>53)</sup> 둘째, 돌연사의 경우에는 건강상태나 신체적 특성, 심혈관질환과 같은 가족병력, 과도한 업무와 정책 결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을 해치는 생활습성, 보유질환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sup>54)</sup> 셋째, 사고사의 경우에는 용천역 폭발사고

---

53) 통상 장기간의 투병기간은 집단지도체제 구비 등 지도체제의 원활한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일인지배자의 퇴임시 연령은 래닌의 사례처럼 후보자 설정범위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小倉和夫, 『權力の繼承』, 166~167쪽 참고. 북한은 이 점과 관련하여 ‘후계자론’에서 후계자의 원칙 중 하나로 ‘세대교체론’을 내세우고 있다. 세대교체론에는 후계자문제 자체가 세대교체 문제일 수밖에 없고 잦은 지도자 교체는 통치의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 45~50쪽 참조.

54) 김정일이 아직 젊고 비교적 건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임을 배제하는 견해도 있다. 김정일 역시 환갑을 맞이할 당시 “자신은 건강하기 때문에 축하행사는 10년 후에 하는 게 좋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다. 『AERA』(2002. 4. 22), 75쪽. 그러나 여기서 열거한 사항들이 모두 김정일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것만은 틀림없다.

와 같은 폭발·붕괴사고, 오발사고, 열차나 차량사고 등 다양한 돌발적 원인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살의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권력승계의 계기로서 살해 주체와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이는 쿠데타나 민중봉기 등 다른 정치적 요인과 중층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한 승계 유형으로서는 반대파 음모, 대중봉기, 쿠데타, 외세개입 등과 그 복합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핵문제의 악화로 인한 분쟁의 발생이나 김정일의 급사 등과 같은 북한 정세의 급속한 변화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다. 반대파 음모는 개혁·개방이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등으로부터 기인할 수 있다. 대중봉기는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통제의 임계선이 붕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쿠데타는 후진적인 정치체제에서 종종 나타났던 변동 방식으로 김정일의 안위와 결부지어 상정할 수 있다. 외세개입은 북한 급변사태의 영향을 차단하거나 김정일의 교체를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시도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각각 이념형에 불과하며 승계계기가 작동하면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가능성이 높다.

## 2) 권력승계 과정과 권력구조 변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 과정이 되풀이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후계자의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과거 이러한 작업은 수령으로의 고도의 권력집중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최고지도부의 정비와 동시에 집중적인 ‘신화’ 창출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정치적 신화 창출은 1960년 중반 이후 사회적 연대성을 증진시키고 지도부를 신성화시키

는 한편, 체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정치적 동일화’와 체제를 유지·강화케 하는 ‘이성적 정당화’를 촉진시켜 체제 내부의 통합력을 높이는 기능을 하였다. 이러한 신화 창출을 선도해 나갔던 것이 바로 후계자 김정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권력과 권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계승이 시작되었다.

정치권력이 기능화하기 위해서는 정통성 확보 이전에 권력의 획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인지배체제하에서는 물리적 강제력에 대한 분점을 허용해주는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인지배체제의 특성상 후계자에게 권력의 일부를 승계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행위이다. 후계자가 승계된 권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권력조차 획득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고, 권력의 중심이 후계자에게 쏠림으로써 일인지배자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권력을 분점하고 공동 통치를 이루면서 후계자의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승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편이지만,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일인지배자가 후계자에게 권력 분점을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sup>55)</sup>

현재 북한에서 권력승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권력분점에 대한 정지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에 이는 후계자 지명 이전에는 본격적인 후계자 수업과 잠재적 후보자들의 제거, 후계자 지명 이후에는 권력기구에 대한 통제권 이양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징후 중 이와 관련한 것은 ‘김정철의 조직지도부 활동설’<sup>56)</sup>과 ‘장성택 제거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각종 후계

---

55) 김정일이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된 후 김일성과 쌍두체제를 이루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경험은 심리적으로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6) 당 조직 중 조직지도부는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각급 조직에 대한 검열권 등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일찍이 김일성은 조직지도부



자 수업의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개혁·개방 조치 이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한편 권력은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서만 지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 후계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해주는 작업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후계자가 ‘역사적’ 정통성과 ‘도덕적’ 정통성을 독점한 가운데 자기신비화의 경지에 까지 도달해야 별 잡음 없이 승계과정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통성 확보 작업은 과거와 승계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체제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일인지 배체제하에서는 보통 전임자의 권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피지배자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의 권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각종 미란다(miranda)와 크레덴다(credenda) 방식에 의해 조성된 전임자 승배는 후계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과거의 과오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목표 설정조차도 전임자의 권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덩샤오핑(鄧小平)의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이다.<sup>57)</sup>

의 중요성에 대해 “당을 꾸리며 당을 움직이는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는 “조직부, 선전선동부이며” “당사업이 잘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는…… 특히 당 조직부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일성,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1962. 3. 8.), 『김일성저작집』, 제1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45쪽. 김정일의 후계자 역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체를 손금 보듯이 꿰뚫고 있는 조직지도부를 가장 먼저 장악하여야 한다. 조직지도부에 대한 설명은 박형중·이교덕·정창현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164~168쪽 참조.

- 57) “실천이야말로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사실을 통해 올바른 것을 찾아 얻는다(實事求是)”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주장은 마오쩌둥 사상에 근거를 두고 그의 무오류성과 절대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1981년 6월 27일 개막된 11기 3중 전회에서 ‘문화대혁명은 중대한 오류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있었던 “건국 이래의 역사적 문제에 관한 당의 결의”는 당 독재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로 전임자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

그러나 현재 북한이 처한 승계 조건은 ‘강고한’ 일인지배체제를 전제로 한 권력승계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보통 정치권력, 경제권력, 이데올로기 등 3중의 당-국가 체제인 사회주의 체제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변화과정은 각기 특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국가 권력 독점의 이완 및 해체 과정, 경제적 소유권과 결정권 독점의 이완 및 해체 과정, 개인과 사회의 해방 과정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변화는 시간적 선후성은 있으나, 어느 한 분야의 변화만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sup>58)</sup> 특히 경제권력 측면에서는 경제정책 결정권의 분화, 국가자원에 대한 관리권의 분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의 분화가 단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과정을 북한에 적용해보면, 북한이 처한 구조적 환경은 소위 ‘수령제’를 전제로 한 권력승계의 제약요건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권력적 측면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를 위한 당 기구의 역할 축소나 각급 단위 경제기관들의 자율성 증대라는 부분적 분권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개인에 대한 근본적인 후견 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 국가와 사회 관계의 변화는 국가권력의 점진적 이완을 촉진시키고 있다.

계획명령의 절대화와 관료적 조정기제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 대신, 계획명령의 점차적 축소, 시장적 조정기제 도입 확대, ‘계획’과 ‘시장’의 공존 등이 모색되는 것은 ‘수령제’ 정치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

---

은 아니었다.

58) 이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서울: 해남, 2004), 제3부 참조.

이다. 또한 국가의 사회에 대한 지배 능력 저하는 개인에 대한 조직적·사상적 통제의 점진적 이완과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의 증대, 신분제적 계층구조의 약화와 삶에 대한 대안적 사고의 저변 확대 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김정일 아들로의 사전 지명에 의한 권력승계가 추진 되더라도 ‘수령론’에 기반을 둔 강고한 일인지배체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한편 김정일이 급거 퇴임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과도기적인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 승계 위기가 관리되고 이후 ‘제한적’ 일인지배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지도체제로는 김정일의 직계가족들이 부문별 이해집단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가운데 통치 영역을 분담하는 ‘족벌’ 집단지도체제, 김일성·김정일의 권위로부터 정통성의 원천을 찾는 이유로 형식상 김정일 직계가, 실제상 당·정·군의 주요 엘리트들이 통치하는 ‘의사’ 집단지도체제, 군사정권처럼 군인들이 실제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군중심’ 집단지도체제, 당의 공식기구들을 통해 비상통치를 수행하는 ‘당중심’ 집단지도체제 등을 이념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 3) 권력승계 결정주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은 김일성의 의지와 후견 역할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다음세대 후계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김정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타 요인들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정일의 의지는 김정일 정권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다. 현재 김정일은 북한 내에서 당·정·군과 보안기구들을 통제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신격화

된 권위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에 의한 후계자 사전 지명이나 유족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권력승계에 있어 가장 큰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승계 조건 때문에 김정일의 단독적인 의지만으로 권력승계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최고지도부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김정일의 후계자 결정에 대한 의중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본격적인 권력승계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권력승계 문제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와 정보들의 난무도 이들의 영향력 경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현재 북한 최고지도부의 실력자들은 대체로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승계 국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담당했던 당 정치국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이 여전히 국가 전 분야의 사업을 장악하고 집행을 지도하는 최고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지만, 당의 일상적인 사업은 비서국과 각급 당위원회의 계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일의 국가부문 승계의 제도적 수단이었던 국방위원회는 인민군과 국가부문을 연결시켜 국가동원을 가능케 하는 국가통치의 제도적 장치이자 선군정치의 상징적 기구로 이해되고 있다. 군사에 관한 국방위원회의 역할은 ‘지도’와 ‘관리’이다. 국방위원회의 구성은 국방을 상징하고 국방과 관련 있는 제2경제위원회 등의 부서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권력승계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군 지휘권은 국방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당규약상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당-국가체제에서는 당내 군사기구와 그의 통제를 받는 군대 내 당 기구를 통해 무력 전반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물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

고<sup>59)</sup> 사회 전반에 걸친 군의 다양한 역할 수행을 지도하기는 어렵지만, 군에 대한 지휘와 통제에 더 적합하도록 각 분과의 조직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김정일이 급거 퇴임하는 경우에도 최고지도부는 승계 위기와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sup>60)</sup> 이 경우에는 당 중앙군사 위원들과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비상체제가 구성되어 당 정치국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떤 분과도 당·정·군과 보안기구 모두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내외적 위협에 맞서 각 분과 스스로의 신변안전을 도모하고 비상통치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를 이루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결정주체로서 하위엘리트 집단을 들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승계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권력 집중의 분산과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 축소이다. 이는 권력승계 후보자들이 각 계선의 조직이나 기능집단과 접촉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정·군 및 보안기구 그리고 기능집단의 하부 책임자들과 지방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협상능력은 제고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조치들이 확대되면 당·국가 체제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하위엘리트들의 특권이 가장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혁에 대한 직간접적인 저항이 권력승계과정에서 표출

---

59) 국내 한 신문이 구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공식으로 추정되던 당 중앙군사 위원장을 김정일이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서명으로 2003년 4월 7일자로 「전시사업체척」이 작성, 배포되었다. [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501051744201&code=910303](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501051744201&code=910303).

60) 황장엽은 이에 대해 “김정일체제만 없어진다면 후계자가 누구든 2년 이상 못 간다”며 “마지막까지 버틸 것이라고 일각에서 생각하는 군부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합뉴스』, 2004년 10월 19일.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주민들 역시 권력승계과정에서 영향력은 증대할 수 있다. 북한에는 제도적 승계절차에 대한 규칙이 부재한 관계로 권력승계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거의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혈연관계에 의거한 선위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밑으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속성상 후계자에 대한 대중적 신망은 형식적으로라도 구비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망에 대한 지지를 결여한다면 후계체제는 영속성을 갖기 어렵다.

개혁의 초기단계에서 개혁을 통해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부류는 개혁파와 일반주민들이다. 일반주민들은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의 고통이 닥치기 전까지는 경제적 생활 향상과 사회적 통제의 이완 때문에 개혁에 우호적이다. 따라서 개혁 조치들이 불가역적인 단계로 접어든 국면에서 후계자가 대중적 신망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 이슈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권력승계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중국과 미국, 남한 등 외부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외부요인들은 후계자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김정일의 아들에 대한 선위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봉건왕조 세습’이라는 국제적 비난은 명약관화한 일로서 중국의 국익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의 근본 국익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권력승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을 강조하며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sup>61)</sup>

---

61) 임을출, “김정철 후계 체제’ 굳어지나”, 『한겨레 21』, 제526호(2004. 9. 9).

#### 4) 권력승계 위기

김정일이 강력한 후견자가 될 경우에는 승계경쟁이 ‘제한 경쟁(a limited contest)’이 되어 권력승계가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이 자신의 위상에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후계자의 권력기반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한에서는 그다지 큰 승계 위기를 맞닥뜨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은 내부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권력부문별로 포괄적이고 다증적인 통제체제를 유지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승계위기 예방과 체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인사의 점진적 교체’와 ‘주요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이 북한혁명 30년이 경과한 1970년대에 권력을 승계하여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이루었듯이 그로부터 다시 30년이라는 한 세대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김정일 이후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 핵심권력층의 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각 부문별로 상당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정보·과학기술, 실력과 실리가 강조되면서 이공계 대학 출신의 관료와 30~40대의 혁명3세대들이 급부상하면서 세대교체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와 정책의 구심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화가 유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승계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김정일에 의해 통합되어 왔던 권력 부문별 계선의 대표자들은 자신들 분파의 이해 실현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도권 경쟁을 전개하고 우세한 파벌 형성을 위해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벌여나감으로써 승계경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사전에 후계자가 지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정도의 극단적인 승계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주도권 경쟁과 파벌 형성에서 비롯된 승계위기는 보통 이 데올로기를 반영한 정책 논쟁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는 당-국가 체제에서는 당의 국가 부문에 대한 통제와 자율성에 관한 문제, 경제운영에 있어서 당 기구의 역할과 각 부문과 균형의 문제, 경제 각 분야별 자원 할당 문제, 강권통치 방식의 지속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승인 문제, 전임 통치자에 의한 정치적 희생자들의 처리 문제 등을 두고 정책 쟁점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개혁의 초기단계에서 김정일이 퇴임하면 개혁의 수행 능력과 관계없이 개혁 이슈의 선점을 통해 새로운 정통성을 창출하고자 하는 편에서는 과거 정권을 정책실패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일이 급거 퇴임하는 경우에 승계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권력승계의 계기가 정치적 요인보다 자연적 요인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고, 외부적 압력요인이 잠재적 후보자들의 상호 경쟁을 제한하도록 작용해야 하며, 한국·중국 등 관련국들의 영향력이 권력승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혁·개방 문제 등에 개입할 정도로 증대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차 자료>

金裕民, 『後繼者論』(東京: 新文化社, 1986).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평양: 출판사불명, 198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 력력』(평양: 평양출판사, 1996).

\_\_\_\_\_, 『김정일동지락전(1)』(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조선로동당출판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 제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하며 당대표자회 결정을 관찰할데 대하여”, 도, 시, 군및 공장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1967. 3. 17~24.),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3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결론(1962. 3. 8.), 『김일성저작집』, 제1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 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군부대 정치부련대장이상간부들 및 현지 당, 정권기관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3. 2. 8.), 『김일성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돛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1986. 5. 31.),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한 연설(1971. 6. 24.),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당조직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1974. 8. 2.), 『김정일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1967. 6. 15.),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L.C.>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1982. 10. 17.), 『김정일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_\_\_\_\_,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 창작에 모든힘을 집중하자”,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4. 12. 10.), 『김정일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로동신문』, 2004년 2월 21일.

<2차 자료>

- 김진계·김응교, 『어는 ‘북조선 인민’의 수기 조국(하)』(서울: 현장문학사, 1990).  
손광주, 『김정일 리포트』(서울: 바다출판사, 2003).  
김현식·손광주, 『다큐멘터리 金正日』(서울: 천지미디어, 1997).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上卷(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朴奎植, 『김정일평전』(서울: 陽文閣, 1992).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서울: 해남, 2004)  
\_\_\_\_\_, 『북한의 정치와 권력: 지배관계의 기원과 개념, 구조와 동태』(서울: 백산  
자료원, 2002).  
박형중·이교덕·정창현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  
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산케이신문 특별취재반, 임홍빈 옮김, 『모택동비록(上)』(서울: 문학사상사, 2001).  
성혜량, 『등나무집』(서울: 지식나라, 2000).  
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中央日報社,  
1994).  
安秉永, 『現代共產主義研究』(서울: 한길사, 198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서울: 중심, 2001).  
\_\_\_\_\_,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_\_\_\_\_,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정창현, 『결에서 본 김정일』(서울: 토지, 1999).  
최 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정치사』(서울: 한국방송출판, 2002).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金正日』(서울: 中央日報社, 1994).  
황장엽,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서울: 한울, 1999).
- 金光庸, “北韓 ‘首領制’ 정치체제의 構造와 特性에 관한 연구”(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5).  
김광인, “북한 권력승계에 관한 연구”(建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8).  
김용현, “북한의 수령제 형성과 군사화”, 『로동신문을 통해 본 '60년대 북한 사  
회의 변화』(2004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4. 3. 18).  
박형중, “북한정치 연구”,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 1999).  
申敬完, “결에서 본 金正日(上)”, 『月刊中央』(1991. 6).  
신평길, “金正日체제의 출범과 그 통치체계의 확립(II)”, 『北韓』(1995. 2).  
이기동,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어디까지 왔나”, 『신동아』, 2004년 4월,  
<shindonga.donga.com>.  
이수석, “김정일연구 쟁점과 과제”, 『현대 북한 연구와 남북관계』(북한연구학회

2004 추계학술회의 논문집, 2004. 9. 17).

- 임을출, “‘김정철 후계 체제’ 굳어지나”, 『한겨레 21』, 제526호(2004. 9. 9).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후계 문제: 현황과 전망”, 『북한 사회의 입체적 이해와 북한연구』 (북한연구학회 2004년도 연말학술회의 자료집, 2004. 11. 26).  
정영철, “김정일 체제 형성의 사회정치적 기원: 1967~1982”(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연합뉴스』, 2004년 10월 19일.

『중앙일보』, 2001년 7월 31일.

<[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501051744201&code=910303](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501051744201&code=910303)>.

Rush, Myron, *How Communist States Change Their Ruler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 Press, 1974).

\_\_\_\_\_, *Political Succession in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Nowak, Leszek, *Power and Civil Society: Toward a Dynamic Theory of Real Socialism* (New York: Greenwood Pr., 1991).

Gill, Grame, “Institutionalism and Revolution: Rules an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Soviet Studies*, Vol. XXXII, No. 2 (April 1985).

小倉和夫, 『權力の繼承』(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85).

『AERA』(2002. 4. 22).

## Abstract

# Issues and Prospect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Song Jung Ho(KINU, Political Science)

As media and newspaper have been flooded with reported rumor and articles about power succession from North Korean leader Kim Jung Il, generating great interest in this issue not only in relevant authorities but also among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approach shown in such rumors and reports seems to fail to explain the issue and provide prospects in an objective and scientific way. Besides the fact that they provided analysis by overinterpreting some signs of power transfer, they lacked considerations in the difference in conditions and environment of power succession between the present and the future.

This paper analyzes key issue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and provides a future outlook based on the analysis. In the study, the

author compared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to actual cases of power succession in socialist states. The mode of initiation of power succession, power succession process and the subsequent change in the power structure,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ion, and the succession crisis were covered, borrowing the analysis framework of Myron Rush to explain key issues of power succession in North Korea, with two assumptions of conventional succession process and sudden retirement of Kim Jung Il.

Key words: power succession, mode of initiation of power succession, power succession process,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ion, succession crisis

## 필자 약력(계재순)

### 송정호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한양대학교 강사. 1990년에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에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김정일 권력승계 공식화 과정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논문을 받았다. 주요 논저로는 “김일성의 5·25 교시 전후 경제사회적 변화에 관한 연구”(2003), 『북한청년 영철씨의 시장경제 알아보기』(공저, 2003) 등이 있다.